

'90년대의 환경정책방향

曹京植

〈환경처장관〉

이 자료는 지난 5월 11일 가든호텔에서 열린 한국가스연맹 주최의 조찬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편집자註〉

I.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세계적 추세

1. 지구환경 위기의식 고조

-환경문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보면 농공업사회까지는 생산활동이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음.

-1760년 산업혁명이후, 공업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인류에게 커다란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으나, 그 반면에는 각종公害를 유발시킴으로써 환경을 악화

○지구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CFC)을 과용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암등 질병이 증가

○이와함께 石炭·石油등 에너지사용의 증가에 따라 지구기온이 높아지는 온실효과가 나타나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되어 해안도시가 침수되어가며, 산성비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

-이와같이 위기에 처한 지구를 타임誌는 지난 '89년, 「올해의 人物」로 선정하고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진단

-세계의 주요 과학자·정치가들은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는 회복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실증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 세계인의 관심 고조

* '88. 11月 美國 네바다州 보올더에서 각국의 과학자 등 33명 참석

2. 지구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세계각국의 노력

-이와같은 「지구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각국은 환경문제를 군비축소 보다도 더 중요한 국제협력분야로 간주

종래	현재
국제평화를 위한 군비 축소	인류생존을 위한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협력 시급
국제경제안정등이 과제	

-세계각국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이 참가한 가운

- 데 지구환경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유엔 인간 환경선언」을 선포함과 아울러 유엔 환경기구(UNEP)를 창설하여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
- '88. 12. 부시 美國대통령은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정상 회담(Environmnet Summit)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취임후 첫번째로 캐나다를 방문하여 양국간에 산성비 대책에 대한 협정을 체결
 - 지난 4월에는 지구 온실방지를 위한 세계 과학·환경·경제장관회의를 백악관에서 개최, 미국, 서독, 프랑스등 18개국 참가
- '88. 12. 蘇聯의 고르바초프는 유엔 연설에서 『군비축소와 더불어 지구 환경위협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국제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고 역설
- 日本의 다케시다 前 수상도 작년 2월 시정연설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을 東京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세계에 공헌하는 日本」을 표방, 국제적인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외교방침을 발표

- 환경오염물질의 생산·소비 및 국제간 수출입을 둘러싸고 선·후진국간에 갈등이 발생
- 예를 들면 각종 전자제품에 많이 쓰이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등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경우('87. 9 몬트리올협약)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차질
 -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환경각료회의('89. 3)에서 中國·인도등 개도국은 현재 환경파괴현상의 주된 책임은 선진국에 있으므로 선진국은 대체품개발과 함께 후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요구
 - 또한 대기환경대책을 위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89. 3) 세계정상회담(24개국 참가)에서 중남미, 아프리카등의 대표들은 후진국 환경피해에 대하여 선진국이 보상할 것을 요구
- 이와함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진국에서는 이를 수입하는 등 각국간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국제간의 마찰이 야기
 - 선진국의 산업폐기물을 무분별하게 후진국에 수출하는 것은 후진국 환경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차원에서 이를 규제토록 하자는 국제회의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89. 3)

3. 지구환경대책과 관련, 先·後進國間的 갈등

II. 우리나라의 환경실상

1. 환경문제의 실상

(1) 환경문제의 대두

- '60년대는 실업과 빈곤으로부터의 탈피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
 - 부존자원이 적고 국내자본형성이 어려운 여건에서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이 불가피하여 환경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음
- '70년대는 전반적인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으로 환경문제가 일부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고도성장파 경제개발이 정책의 최우선
 - 이때부터 공기와 강물이 오염되고 주변환경이 더럽혀

- 지기 시작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밀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 '80년대도 계속해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환경오염현상은 더욱 심화
 - 수질은 계속 악화, 일부에서는 수도물까지도 별도 정수처리를 해야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인식
 - 대기도 오염이 가중되어 대도시 및 일부 공장지역에서 동절기에 호흡기질환등의 발생을 우려
 - 각종 폐기물도 그 처리가 미흡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에 2차오염으로 확산되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2)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원인

-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서 유황함량이 많은 연탄과 벙커-C油가 난방연료의 대부분을 차지
- 가정의 78%가 연탄을, 공장, 빌딩의 대부분이 벙커-C油를 사용함으로써 아황산가스가 다량 배출
 - *가스, 전기등 청정연료 사용비율이 美國은 96%, 日本은 97%인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연탄과 벙커-C油 사용비율이 69%
- 이와함께 자동차의 급증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체차량의 43%가 매연이 많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대기오염을 더욱 가중
- 水質의 경우 생활하수는 年7%, 산업폐수는 年20%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처리시설은 크게 부족하여 오염현상은 더욱 심화
 -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율은 28%에 불과(프랑스 99%, 미국 72%)
- 폐기물은 소비생활의 향상과 생산활동의 증가로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매립지등 처리시설은 부족하여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거나 불법投棄되는 사례가 빈번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시행
- 오염이 극심한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장관리기능 강화
- 대기오염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低公害자동차를 생산토록하는 한편, LNG등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
 - *아황산가스 低減을 위한 정부의 노력
 - '81. 7. 1. 低硫黃 벙커C油 사용의무화조치(서울지역)
 - '82. 3. 1. 低硫黃油 사용지역 확대(首都圈지역까지)
 - '85. 3. 1. 低硫黃油 사용의무화지역 전국확대(24개시, 7개군)
 - '88. 1. 1. 無鉛휘발유사용 승용차 생산공급
 - '88. 9. 1. LNG사용 의무화(서울지역 난방연료 2톤이상 건물)

- 또한 기업의 공해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
 - 방지설비투자에 대해 稅額控除, 機資材輸入 관세감면
 - 環境汚染防止基金을 조성,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장기저리융자
- 이와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내의 행정여건은 비교적 취약한 실정
 - 환경정책 추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環境廳을 環境處로 승격

2.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정부 노력

-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환경의 영향권역별 관리를 목표로 6個 지방환경청을 설치하고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Ⅲ. '90년대의 환경정책방향

1. 환경정책의 여건 및 방향

〈경제·사회적 여건〉

- ◇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선진국 체도 진입
- ◇경제정의실현으로 사회적 형평의 제고
- ◇지역 균형개발로 도농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

—민주·번영·통일을 성취해야 하는 희망의 시대—

〈환경행정여건〉

- ◇산업구조의 고도화, 토지이용의 확대
- ◇에너지사용량의 급증, 소비생활의 다양화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광역화현상—

〈환경정책방향〉

-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시책을 추진
-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조성, 국민의 환경권 보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

2. 1990년을 「環境保全元年」으로 설정

- 환경보전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90년대를 시작하는 해이며, 새롭게 출발하는 환경처의 첫해인 금년을 「環境保全元年」으로 설정하여
- 환경정책의 새로운 章을 여는 기준년도로 하여 획기적인 환경보전여건을 조성하는 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

3. 환경정책추진 기초

- 정부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경제·사회여건에 상응하는 환경정책의 추진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등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 기업은 환경오염을 방지시키기 위한 투자가 제품생산비의 당연한 일부라는 기업윤리를 정립하여,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함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생산공정의 개선과 低公害기술개발을 촉진시키도록 하며,
- 국민각자는 환경보전주체로서 환경에 대한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자임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오염행위를 자제하고 환경오염의 감시역할을 제고하는 등
-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三位一體의 협력으로 환경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임.

4. 重點 시책방향

- (1) 대도시, 공단지역 대기오염요인의 원천적 제거

- 청정연료공급 확대로 선진국수준의 대기환경을 이룩하는 한편, 오염도의 상시 공개로 오염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이를 위해 우선 精油會社로 하여금 脫黃施設을 설치토록 촉진하여 유황성분이 적은 B-C油와 輕油의 공급을 확대하여나갈 계획
- 그리고 공해가 없는 LNG등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지역의 업무용·영업용 및 공공빌딩의 난방시설에 LNG사용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까지 사용대상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 대상지역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서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 이와 함께 연탄을 사용하는 소형주택이 밀집되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도 LNG사용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 '90년대 LNG공급 계획(首都圏)

	1989	1992	2001
供給量	350千톤	798千톤	1,619千톤
大氣環境개선	0.056ppm	0.05ppm	0.03ppm

- 또한 低公害자동차의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승용차량이 무연휘발유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煤煙이 다량 배출되는 소형화물차 및 시내버스는 휘발유 또는 LPG로 연료대체를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대형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저공해화하도록 유도할 계획
- 이와 병행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물론 수입자동차에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가스배출장치에 결함이 발생할 때는 제작회사가 책임을 지는 缺陷是正命命制度(Recall)를 실시
- 그리고 대기오염 자동감시체제를 확충하기 위하여 오염극심지역 주요공장등의 굴뚝에 자동감시장치를 설치
- 대기오염도를 국민에게 항시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에 이어 전국의 주요도시와 공업단지지역에도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계획
- TV등에 日日汚染度를 공표하여 국민의 경각심고취 및 자발적 협조를 유도

(2) 上水源 및 하천수질의 개선

- 간단한 정수처리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上水源을 보호하고, 물의 이용과 생태계의 보전에 알맞도록 하천수질을 회복
- 상수원의 수질보호대책으로서는 주요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역을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 인구·위락시설등이 밀집되어 오염이 가속되고 있는 八堂, 大清湖 주변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제한등 오염원에 대한 입지를 규제하고
 - 이들 지역의 마을단위로 생활오수와 가축폐수등에 대한 간이공동정화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 오염극심하천에 대한 집중정화대책으로서 하천의 자체정화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河床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導水路를 정비하는 등 근본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 安養川, 琴湖江 등 전국의 오염극심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
- 생활하수와 공장폐수에 대한 정화처리시설을 확충하여 '96년까지 하수처리율을 현재 28%에서 65%로 제고

(3) 폐기물의 적정처리체계 확립

-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폐기물로 인한 2次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위생매립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
 - 현재는 金浦지구 대단위 海岸衛生埋立地를 조성중, 향후 매립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녹지 또는 공유수면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
- 또한 분리수거를 정착화하여 재생이용율을 제고함으로써 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자원절약을 도모하는등 폐기물관리체계를 개선
- 산업폐기물도 적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폐기물중 유해성이 높은 특정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 최근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산업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 매립지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 앞으로는 일정량 이상의 배출업소와 신규로 조성되

는 공업단지에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할 계획

(4) 환경보전실천 국민의식 함양

- 민간의 자율적인 홍보 활성화로 환경보전실천을 생활화하는 한편, 정부의 환경시책방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 민간주도의 환경보전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환경보전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는 등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

(5) 환경보전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

- 생산공정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거나, 유해한 중금속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과 저공해내지 무공해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토록 유도
- 이러한 기술을 개발·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시범업체로 지정하여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출원시 우선하여 심사토록 추천하는 등 저공해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 앞으로 환경산업을 高附加價値 첨단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외시장개척까지도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

◇이와같은 환경정책을 강화해나가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앞으로 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양립이 가능한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됨.

Ⅳ. 환경보전과 경제·사회 발전

1.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제성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

- 만일 현재처럼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자원고갈, 환경오염으로 앞으로 100년 이내에 지구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주장(Rome Club, 1972)
- 일부 경제학자들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서로 상반관계(Trade Off)에 있다고 보고 국민총생산(GNP)의 증가가 곧 국민총공해(Gross National Pollution, GNP)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경제성장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경제성장정지론(Zero Economic Growth, ZEG)과 인구성장정지론(Zero Population Growth, ZPG)을 주장하고 있음(英國의 도시경제학자 "울만"등)
- 이와같은 논리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장등 산업시설을 줄이거나 생산활동을 억제해서라도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

문제는 적정수준의 성장을 하지않을 경우 해마다 누적되는 실업자문제등으로 경제·사회가 불안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임. 또한 재투자 및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기존의 경제구조를 정체시켜, 결과적으로 성장을 퇴보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어려움에 직면

2. 환경보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

(1) 환경보전은 성장잠재력을 배양

- 환경보전은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인 자연자원과 에너지, 노동력을 잘 보전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배양한다는 것임. 즉 환경보전을 통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기름진 자연자원 및 토양과 해양자원을 잘 가꾸어 이를 양질의 생산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출증대효과를

가져오며,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생산환경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직접적으로 경제여건을 부추키는 효과를 가져옴

- 이와함께 쾌적한 환경의 조성은 각종 공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나아가서 오염방지시설비와 원상회복을 위한 투자 등 국가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

(2) 또한 환경보전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 공해방지시설비의 확충 즉, 폐·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 공원조성등의 환경부문에 대한 공공투자는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을 개선하게 됨으로써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게 됨.
- 또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시설에 대한 개념도 종래에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통신시설등만을 포함했으나, 현대복지국가에서는 공해방지시설이 경제적 후생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파악이 되어야 함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概念 및 認識에 대한 변화

	종래	현재
시대적 여건	경제개발 우선	경제사회 균형발전
중점 투자	도로, 항만, 철도, 공항, 통신시설등	산업기반시설과 함께 공해방지시설, 상·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 공원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
효과	산업화, 도시화 및 경제성장 추진	경제적후생가치 증대 및 성장잠재력 제고

- 따라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형성과 관련, 환경부문에 대한 공공투자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함

○종래의 환경부문에 대한 경제투자는 오염피해를 사후

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베푸는 보조(Subsidy) 또는 지원의 성격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환경부문에 대한 공공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선진사회가 가장 필요로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인식해야 함

(3) 소득수주의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기반은 「쾌적한 환경」임

-경제성장수준에 비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환경부문 투자와 강력한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이 필요함.

-소득수준이 증대함에 따라 인간욕구는 보다 높은 환경의 질을 요구하게 됨으로 이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불만과 갈등 등으로 반사회적활동이나 환경분쟁소지가 더욱 커지게 될 것임.

-경제규제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는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야 함. 그러나 환경부문에 대한 적정투자수준을 계량화하기는 곤란

○예를 들면 아황산가스를 1ppm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및 투자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규모(GNP)의 일정비율을 환경투자로 할당하고 있는 실정임.

OECD제국의 환경투자(중앙정부 기준) 수준

	日本	스웨덴	英國	美國	스위스	한 국
GNP대비(%)	0.34	1.69	0.74	0.57	1.03	(’89, ’90) 0.13

(자료) OECD, Environmental policy and Technical Change, 1985 PARIS

(4) 환경투자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발생

-반공해 및 빈민운동가들이 주장하는 환경피해는 가진 자로부터 받는 피해라는 그릇된 인식임. 가진 자는 재벌, 기업경영자, 공장등 생산시설 소유자이며, 피해자는 서민, 대중근로자, 도시빈민등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환경투자로 인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을 예시하면 한강종합개발과 같은 도심 주변 하천정

화사업, 연탄사용 서민가정에 LNG공급, 도로변, 방음벽설치, 양질의 수도물공급, 공단지역의 인근 농지 및 어장보전대책, 도시의 녹지공간확보 등임.

-이와같이 환경보전을 잘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져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여 경제개발과 복지에 대한 균형발전과 함께 사회적 형평의 기틀을 마련하게 됨.

(5) 환경보전은 기술개발 촉진효과를 발생

-강력한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은 공해방지시설 또는 무공해기술(Clean Technology)의 개발을 촉진하거나 관련산업을 진흥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그 한례로 日本의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강화가 자동차산업에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게된 좋은 사례로서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동차회사들도 美國시장 진출시 엄격하고 까다로운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상호보완관계 —
 이와같이 兩者의 입장을 살펴본 결과, 환경보전이 성장억제요인보다 성장잠재력을 부추키는 비중이 더욱 크다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상호보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결론임.

※이와 같은 논리를 뒷받침하는 주장

· 영국의 David Pearce 등은 「環境의 質 개선이 발전과 성장에 공헌한다」고 주장, 성장과 환경관계는 상반관계(Trade Off)가 아니고 상호보완관계(Complementarity)에 있다고 함.

· Herman Kahn은 「The next 200 years」의 내용에서 「生産性向上과 기술개발로 공해없고 값싼 에너지의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여 「로마클럽」의 「成長限界」에 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성장한계는 예상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